

#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고용 안정에 총력대응”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제  
“기준대책 넘어서는 추가대책 강구  
4차 재난지원금 추경예산에  
일자리예산 충분히 포함 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따라 취업자 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와 맞먹는 규모로 감소한 데 대해 정부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21년 1월 고용동향’에서 확인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8000명이다. 이는 1년 전보다 98만2000명 감소한 것으로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128.3만명) 이후 최대 폭으로 줄어든 규모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같은 고용 위기 상황을 언급한 뒤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정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주기 바란다.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기업에도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민간 기업에 일자리 창출 여건 마련도 조성해 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온전한 고용 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을 언급하며 “방역 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속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도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이어진 방역 조치 강화 비판과 함께 경제 위기 또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특히 절박한 민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는 오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사업 21일 마감

농식품부, 548만명 응모 225억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연말연시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결제하면 할인해주는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사업’이 이달 21일로 마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 29일부터 재개했던 배달앱 외식할인 지원 사업을 예산의 집행과 그간의 추이를 고려해 소비자 혼선과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행사 마감일자를 2월 21일로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카드사를 통한 행사 참여 응모는 16일 자정까지이며, 카드사 응모를 완료한 사용자가 2월 21일까지 배달앱을 통해 외식을 한 경우까지 포함해 2만원 이상 3회 결제하면 4회 결제시 1만원을 환급해 준다.

이번 외식할인에는 2월 7일 기준 총 548만명이 응모해 1324만건(2만원 이상)을 결제했고, 이중 목표실적 4회 달성은 225만건으로 카드사를 통해 총 225억원이 환급 또는 적립금으로 지급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文, 정의용·황희·권칠승 장관에 임명장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등 당부  
배우자·부친에 꽃말담긴 꽃다발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신임 정의용 외교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정의용 외교부·황희 문화체육관광부·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야당이 정의용·황희 장관을 ‘부적격 인사’로 지적한 점은 언급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당부했다.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세 장관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했다. 이어 정 장관 배우자에게는 비모란선인장을 전달했다. 황 장관 배우자의 경우 ‘역경에 굴하지 않는 힘’, ‘행복’이라는 꽃말이 각각 담긴 케모마일과 스위트피로 구성된 꽃다발을 전달했다. 권 장관 부친께도 ‘당신을 보호해 드린다’, ‘희망’이라는 꽃말이 각각 담긴 말채나무와 개나리로 구성된 꽃다발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비모란선인장 전달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 중국·일본·러시아·EU 등 주요국과의 원만한 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대한 정착·발전 등 ‘세계 속의 한국 위상을 한 단계 올려 달라’는 당부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케모마일과 스위트피로 구성된 꽃다발 전달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체육·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여해 달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권 장관 부친께 전한 꽃다발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판로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달라는 당부의 의미”라고 소개했다.

## 내달 둘째주 약 9일간 ‘한미연합훈련’ 실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 진행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은 낮아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3월 둘째 주에 약 9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부 일정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 검증 실시여부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양국 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 훈련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실제 병력이 투입되는 실기동훈련(FTX)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 대략적인 훈련 일정은 8일부터 19일까지 1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한미 군당국은 2018년부터 북-미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안보정세를 반영해 한미연합훈련을 실 기동훈련 없이

임명장 수여식 이후 문 대통령은 세 장관과 환담했고, 각각 당부의 말을 남겼다. 먼저 정 장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외교·안보 정책 밑거름이 된 분”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당부하면서도 “주어진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서두르진 말라. 차근차근 접근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어 “신북방·신남방” 등 외교 다변화 노력, 오는 5월 P4G 정상회의,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등을 언급하며 “중견 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번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마지막 기회”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화가 일상화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황 장관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너무 큰 타격을 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정상화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우울한 국민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최대 지원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문화 강국으로의 구체적 위상은 높아졌다. 문화 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최근 체육 분야 폭행 사건 등을 언급한 뒤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이에 황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은 문화·체육·관광계가 피해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 장관에 대한 당부의 말에 최근 현안인 ‘손실보상제’ 제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권 장관에게 코로나19 위기 속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역할을 강조한 뒤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라며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권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자 주춧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등) 피해 지원을 할 때 사각지대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연구하거나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연합작전 능력, 초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 주변 정세 등 3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전작권 전환에 앞서 거쳐야 하는 기초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과정 중, 2019년 8월에 IOC 검증만 제대로 완료된 상황이다.

한편, 한미연합훈련의 실시로 인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자력갱생 등 경제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무력도발로 인한 경제재제단은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을 수립 중인 바 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강경한 방향으로 흐른다면, 북한으로서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